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對韓 공론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대학 부교수)

2018년 하반기 이후, 특히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차이가 있다.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일 양국이 감정을 넘고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큰 지도를 그려 낼 필요가 있다. 그 지도를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물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 차

1. 서론

가. 여론조사를 통하여 본 일본 사회의 對韓 인식

나. 여론조사의 한계

2. 징용공 판결에 관한 중앙 일간지 보도

가. 판결 직후의 사실

나. 판결 후의 각 중앙지의 보도

3. 악화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제안

가. 일본 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고착화와 일본인과의 소통 필요성

나. 일본 사회에서 對韓 감정의 다양성

다.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 일본 사회 안에서 인식의 차이

1. 서론

가. 여론조사를 통하여 본 일본 사회의 對韓 인식

- 2018년 6월 발표된 언론 NPO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46.3%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으나 對韓인식 자체는 개선되는 추세였다고 할 수 있었음
- 2018년 하반기 이후 옥일기 계약 문제, 한국 해경에 의한 잠정 수역 내에서의 일본어선 조업 정지 명령,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판결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일본 사회에서 한국을 둘러싼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대법원판결 이후 일본 사회의 한국에 대한 분위기는 급속히 그리고 더 심하게 악화되고 있음
 - 아사히신문 여론조사(2018년 11월 17-18일 실시)에서는 한국 대법원판결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 “나빠졌다”가 53%, “변함없다”가 41%인 것으로 나타났음
 - NHK 여론조사(2018년 11월 9-11일 실시)에 따르면 배상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 69%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고,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이었음
 - 산케이신문·FNN(Fuji News Network) 공동 여론조사(2018년 11월 20일 실시)에서는 한국을 외교나 경제활동의 상대국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1.6%에 달했음

나. 여론조사의 한계

1) 공론, 정서, 여론

- 여론조사는 대중적인 심정의 확산과 경향, 그 시간 계열적인 변화를 계량적으로 포착하고 있음. 그러나 여론조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등 사회 내부의 담론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충분히 밝혀주지 못하고 있음
- 여론을 공론(public opinion)과 정서(sentiments)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보는 경우, 기존 여론조사에서 파악되는 것은 정서라고 할 수 있음. 여론조사라는 방법에 내포된 한계를 감안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읽을 필요가 있음. 본고에서 사용하는 분위기는 공론과 정서로 구성된 복합체로 여론을 파악함

2) 분석 과제

- 공론은 신문이나 잡지, TV와 같은 전통적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나타나고, 정서는 전통적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공간인 인터넷에서도 나타남. 어떤 사회의 분위기를 분석할 때 여론조사 결과만 이용하면 분위기 중 일부분만 파악할 수 있음. 여론을 공론과 정서로 구별하고, 어떤 미디어에서 공론이나 정서가 표출 또는 내포되는지에 유의해서, 각 미디어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필요
- 본고에서는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에 주목하고 거기서 전개된 공론을 파악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함

징용공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분위기는 급속히, 그리고 더 심하게 악화

2. 징용공 판결에 관한 중앙 일간지 보도

가. 판결 직후의 사실

1) 요미우리신문 (판매 부수: 835만882부)

-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10월 31일자 사설 ‘한일협정에 반하는 배상명령’에서, 대법원판결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장을 하면서 비판. 첫째, 한일 국교 정상화에 즈음하여 맺은 합의에 명백히 반해,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온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인 것; 둘째,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원 징용공도 포함된다는 것은 협상 기록에서 명백하며, 한국 역대 정권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결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 셋째, “(대법원 심리가) 반일 내셔널리즘에 영합해 불합리한 인정을 답습한” 판결이라는 것이었음
- 같은 사설에서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2) 아사히신문 (판매 부수: 570만3,165부)

- 10월 31일자 사설 ‘축적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대응을’은 정부 간 관계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쌓아온 이웃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
- 노무현 정부 시절 국내법을 정비해 원 징용공들에게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정에 따라 국제협정을 둘러싼 견해를 변전시키면, 국가의 정합성(整合性)이 문제시되고 신뢰성도 손상될지도 모른다”라고 경종을 울렸음

**중앙 일간지들은 일제
히 징용공 판결을 사실
에서 다루어**

- 한편, 동사설은 일본 정부에게는 협정을 둘러싼 견해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많은 사람에게 폭력적인 동원이나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엉거주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역사를 마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負)의 역사 (negative history)에서 유래하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물으며, 정치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3) 마이니치신문 (판매 부수 : 257만5,930부)

- 10월 31일자로 사실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조약의 일방적인 해석 변경’은 판결이 한일 기본조약을 뒤집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노무현 정권에 의한 청구권 협정 해석과도 어긋남이 생기고 있음도 거론하여,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조약이나 협정 해석을 변경한다면, 국제법의 규범을 뒤틀어 한일 관계에 큰 대립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종을 울렸음
- “일본도 감정적 대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제가 필요하다”라면서도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라는 것을 자각했으면 한다”라며, 한국 측에 대응을 요구하는 주장을 게재했음

4) 일본경제신문 닛케이신문(판매 부수 : 235만2,951부)

- 10월 31일자 사설은 판결이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태이며 한일 비즈니스에 대한 타격 그리고 한층 더한 한일 관계의 냉각화를 지적했다
- 한일 간 역사 문제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일 역대 정권이 쌓아온 국가 간 협정이나 약속을 경시하고, 어기려 하는 듯한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음
- 판결 배경으로서 사법의 판단이 정권이나 여론에 좌우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음
- 한일 양쪽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 원 징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일본 측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국 정부에는 “국내 문제로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5) 산케이신문 (판매 부수 : 145만7,302부)

- 10월 31일자 사설 ‘항의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가 간의 약속을 무시하는 판결”이며 “한국 사법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협정 준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일본 정부에게는 ICJ 제소 등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대항수단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라며 “(한국으로부터의) 근거 없는 요구에 굴복하면 요구를 더욱 초래할 것”이 되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본 정부는 사과 외교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음

나. 판결 후의 각 중앙지의 보도

1) 요미우리신문

- 10월 31일자 서울발 특파원 기사는 대법원의 사법 판단조차 국민감정에 좌우되기 쉽다고 지적한 뒤, “한일 간에 오랫동안 공유해온 종래의 견해와 입장에 입각하지 않고, 한국 독자의 일방적인 역사관이 짙게 반영되는 것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 11월 1일자 칼럼 ‘편집수첩’에서도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서 동원된 분들은 매우 안쓰럽지만, 반일 내셔널리즘에 휩쓸린 판단일 것”이라며 “국제법을 감안할 이성도 없고 용기도 없다”라고 단언했음
- 11월 2일자 기사 ‘문 대통령 어른거리는 반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사태 수습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 뒤에는 “반일 민족주의 사상이 어른거린다”라고 하여 문 대통령이 “사법 판단이나 국내 여론을 가려내면서 자신의 반일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지적했음
- 11월 30일자 사설 ‘문재인 정권은 수습책을 조속히 보여주라’는 “징용공 재판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둔하다”라고 하며 “아직까지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지적. 이어 “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한국 정부에 의한 원 징용공 보상 확충이나 일본 기업이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징용공 재판의 피고 기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일체가 되어 대처할 필요성과 국제사회를 향한 정부에 의한 정보 발신의 중요성을 지적했음
- 전문가들의 칼럼으로서 12월 15일자 논고 ‘논점 한국은 스스로 체결한 협정 지켜라’ (국제법 전문가인 사카모토 시게키 도시샤대 교수)에서는 첫째, 대법원판결이 65년 체제를 뒤집는 것이고, 한국이 「빈 조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둘째, 징용공 보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바 있다는 것. 셋째,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의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받은 3억 달러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라는 결론에 반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또한, “한국 정부에

**요미우리는 한국이 적
극적으로 사태를 수습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

는 스스로가 체결한 협정을 준수하는 조속한 대응을 바라고 싶다”라며,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는 한국 측이 사태 수습에 나설 필요성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음

**아사히는 판결에 관한
미국인 칼럼, 한일 대담,
연구자 인터뷰를 게재**

2) 아사히신문

- 11월 1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마치다 미쓰구 前 주한일본공사는 “한국의 대법원판결이 53년 전 합의를 뒤집은 것”에 대해 “일본의 노력 부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과거의 결정도 뒤집어도 상관없다는 한국의 국가의 사정이 크다”라고 지적해서 한국 사법에 대한 여론의 영향이라는 면을 시사했음
- 11월 8일자 칼럼 ‘나의 관점’(다마(多磨)대학·를 형성 전략연구소의 브래드 그로서먼(Braed Glosserman) 부소장)은 대법원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리라고 하면서도 일본은 경제 관계에 주목한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향해야 하고 그것은 일본의 약한 지역 외교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지도적인 역할과 발언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음
- 11월 14일자 대담 기사 ‘한일 간 화해의 맹세’(사사에 겐이치로 前외무성 사무차관·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박준우 前 한국 대통령정무수석 비서관)에서 사사에는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 정책에 흔들림이 생기고 있다는 것, 한일 관계에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 특히 한국에서는 지도자의 언행이 국민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무엇을 양보할 수 없는지, 무엇이 다른지, 쌍방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이에서 출발해야한다”라고 주장했음. 박준우는 “미래지향을 강조한 한일 공동선언의 정신이 2005년 시마네현에 의한 ‘다케시마의 날’ 선언으로 훼손되었다는 것,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 정부에 의한 재단 창설로 원 징용공 지원을 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으나,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대법원판결이 사법부의 판단이며, 한국 정부의 최종 판단과 대응을 기다릴 필요성과 국제재판에 부치는 일까지 생기지는 않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시되었음
- 11월 23일에는 3명의 연구자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음. 전직 고교 교사인 다케우치 야스토 근대사 연구가는 동원 실태를 보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 뒤 “불법적 식민지 지배로 인해 노동을 강제했음을 인정하고,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차세대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음. 조선 현대사·현대 조일 관계사를 전

문으로 하는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는 인권이나 인도적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시도가 국제적인 조류가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개인의 피해에 마주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과거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현대한국정치·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부교수는 대법원판결이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모든 것이 위자료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사법부가 한 발짝 내디뎠다”라며, 그 이유로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한 ‘65년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대응은 “너무 지나치”고, 한국 여론을 자극해 한국 정부의 선택지를 좁힐 가능성을 제기했음. 그리고 “일본 정부는 너무 소란을 피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행방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65년 체제의 틀을 깨지 않도록 한일 정상의 정치적 결단과 국내를 설득하는 지도력을 강조했다

3) 마이니치신문

- 11월 7일자 칼럼 ‘오사무의 눈: 힐난할 뿐 아니라’(전 교도통신·서울특파원으로 현재 저널리스트인 아오키 오사무)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근론’으로는 맞지만 “그냥 시끄럽게 한국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할 것들도 있다”라며, 한일 기본조약이 군사독재와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점, 더구나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한일은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 나라”이며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한국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일 쌍방이 어떻게든 지혜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15일자 해설 기사 ‘원 징용공 판결을 둘러싼 판결 한일에 쪼린 가시’(전 서울특파원인 오오누키 토모코 해설위원)는 한국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대응과 일본 측의 냉정한 대응에 관해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흐름과 이를 둘러싼 한국 국내의 치열한 보혁 갈등이 대법원의 판단 배경에 있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 한국 사회 전체에 혁신적인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아, 한일 관계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판결의 심각성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판결이 예상되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사전에 대책을 짜오지 않았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 11월 17일자 칼럼 ‘주간 TV평: 원 징용공 판결 보도를 통한 생각, “쇼비니즘” 미국보다 일본이 중중이다’(TBS TV기자 가네히라 시게키)는 대법원판결에 관한 TV 보도가 ‘한일 간에서 이미 해결된 바 있다’ 혹은 ‘반일’

마이니치의 칼럼은 한국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일 쌍방이 노력할 것을 촉구

을 언급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중 영합이라는 관점 밖에 없고 TV 보도가 '단색'이며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일본 측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11월 28일자 해설 기사 '특집 와이드: 아베 정권의 환언(rephrasing) 체질'은 아베 수상이 '징용공'이라는 명칭을 그만두고 '노동자'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식민지 지배하의 강제노동이 아니라 노동조건에 납득하고 응모한 자유계약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해서 비판했음

**닛케이는 11월1일부터
'원 징용공 판결의 충격'
이라는 기사를 연재**

4) 일본경제신문 (닛케이신문)

- 11월 1일부터 '원 징용공 판결의 충격'이라는 연재 기사가 게재되었음. 제1차 기사(11월 1일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뿐 아니라 정부 자체도 여론의 동향에 좌우되기 쉽다며, 배경에는 보수·혁신과 정치체제가 빈번히 교체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음. 문재인 정부가 보수가가 정한 역사를 재정의할 목적을 갖고 있지만, 북한과 '반일' 구호를 내세울 가능성을 지적하며, 역사 문제가 국내 정치투쟁과 여론 사이에서 재생산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제2차(11월2일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북 문제를 위해 연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에 강경책은 취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 제3차 기사(11월 3일자)는 경제산업성이나 국토교통성은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는 일본 기업이 한 곳이라도 나온다면 한국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관(官)과 민(民)으로 보조(步調)를 맞춰 한국 측에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큰 기업에서는 경영 판단이나 주주들의 압력에 따라 배상이나 화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
- 11월 11일자 칼럼 '한국은 "일국이제도(一國二制度)"인가'(전 서울지국장인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는 역사 문제에서 반일운동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은, 원 징용공이나 원 위안부 본인보다 오히려 정권을 지지하는 좌파계 시민단체나 노조 등"이며 "박 전 대통령을 탄핵·파면으로 몰아가는 '촛불집회'를 선동한 실체는 소수세력"이라고 지적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민심'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서 국익이나 외교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판단하고, 정치지도자에 의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11월 30일자 사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대응책을 내세우라'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나 대법원판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 양국 간의 지자체 교류 연기와 상공회의소의 회의 중

단 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고 한국 정부는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대응책을 제시해야 하며, “일본은 주장을 견지하면서, 우선 상대방의 대응 방안을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음

- 12월 7일자 해설 기사 ‘외교 뒤집는 한국 헌법, 원점은 헌법’(미네기시 편집위원)은 “한국은 헌법에서 ‘반일’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서 이러한 헌법이 일본 기업에 대한 잇따른 배상명령의 근거로 사용되어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일본의 판결을 “한국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다”라고 말한 점에 주목해, 노무현 정부가 원 징용공은 일본과의 협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조차 “한국의 헌법 가치”는 지워버리겠느냐고 주장했다
- 일본 경제신문은 주로 대법원판결이 한일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서 논조를 전개하며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한국 측에 불만이나 불신감을 표명했음. 단, ICJ 제소 등 구체적인 강경책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닛케이는 주로 판결이
한일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5) 산케이신문

- 10월 31일자 칼럼(나무라 다카히로 서울지국장)은 대법원판결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감정을 중시한 판결”이며 “법의 틀을 깨려는 국제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음
- 10월 31일자 칼럼 ‘산케이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일본에 닥친 “새로운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국제적으로 봐도 괴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반일 자세를 선명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반일색이 강했던 노무현 정권”은 좌파계 재판관을 차례로 지명한 데에 더해 “한국의 사법부는 여론에 빌붙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은 애초부터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 11월 1일자 칼럼 ‘아비루 루이의 극언어면’(아비루 루이 편집위원)은, 대법원판결이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 등을 “폭거”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폭거는 취하지 않는다. (중략) 무슨 짓을 해도 반격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을 깔보고 있는 것일 것”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5가지 보복조치”를 언급하면서 “한국 측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일본의 분노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11월 2일자 사설 ‘문 대통령의 연설, 대일관계는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서 대일관계는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고 있다”라며 “남북 유화로 독주한다면 한국은 국제적인 신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강경한 대항
책으로서 ICJ 제소 등을
주장**

- 11월 4일자 칼럼 ‘한국에 2.5조엔 정도를 요구하면 어떨까?’(전 서울 특파원인 가토 다쓰야 편집위원)는 징용공들에 의한 소송이 “향후 세계에 전개되어 ‘일본은 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며 “제2의 위안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이러한 사태를 피하고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대항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ICJ 제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어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이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남긴 개인 재산의 절반가량을 한국에 청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주장했다
- 11월 7일자 사설 ‘징용공 문제, 제소로 한국의 부당(不當)성을 강하게 호소해라’라는 일본 정부는 “부당 판결”을 방지하지 않고,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입히는 사태”를 불허하기 위해, 징용공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널리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며, 그 유효한 수단으로 ICJ 제소를 제기했음
- 11월 8일자 칼럼 ‘한국에는 ‘법의 지배는 없는 것인가’(전 외교관인 미야케 구니히코)는 한국의 행정부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면 얼마나 큰 한국의 국제적 신용 실추로 이어질지를 지적하며 “법의 지배로 이뤄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언동이 얼마나 기괴한지 한국 시민에게 자각시키는 것이 앞으로 필요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이 얼마나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인지를 호소해 나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11월 22일자 사설이나 칼럼에서도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이라는 주장을 볼 수 있었음
- 11월 15일자 논고 ‘일본에 의한 ‘한국 제소’는 반석(盤石)인가’(후쿠이 현립대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조선인 전시 노동에 대해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는 규정이 사실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신하는 것, 나아가 “한국에 대한 제재”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에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30일자 사설 ‘징용공 판결 폭거 제지하는 대항 조치를 서두르자’는 “한국의 불법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법인과 기업을 지킬 온갖 수단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사실을 뒤돌고 폭주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도 책임 있는 대응을 취하지 않고 반일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의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일본과는) 안정된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음
- 산케이신문은 판결 직후부터 약속을 무시하는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한국이라는 관점에 역점을 두어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논고가 실렸고 강경한 대항책으로서 ICJ 제소 등이 주장되었음

3. 악화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제안

가. 일본 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고착화와 일본인과의 소통 필요성

- 중앙 일간지 각지가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전개했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나 외교 스타일, 대일 인식 등에 대해 일본 사회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반일’ 대통령이라는 일본 사회에서 이미지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
-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이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만, 소통 대상자는 한국 국민에 한정되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함. 일본 수상, 외교 관계자 그리고 일본 국민도 소통 대상자가 되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수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나 한국 정부의 사고방식 그리고 한국인의 감정에 대해 일본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

나. 일본 사회에서 對韓 감정의 다양성

-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차이가 있음. 일본 정부에 강경한 조치를 구하거나 문 대통령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는 논조가 있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감안해서 냉정한 대응을 한일 양국 정부나 국민에 호소하는 논조도 있음.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자기 성찰하면서 한일 대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논조도 있음. 일본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공론은 다양성을 알 수 있음
-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다양성을 인식하지 않고 선입견(stereotype)이나 편견이 있으면 소통을 하더라도 한일 관계를 타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음. 서로가 가지는 악화된 감정을 재생산할 뿐이기 때문임

다.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 일본 사회 안에서 인식의 차이

- 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식민지 인식, 다시 말하면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또,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 인식에 차이

한일 간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어

가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음

-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은 한일 간에서 존재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음. 한일 간에서 역사 인식이 차이가 있는 사실을 한일 서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대립이 계속하고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불안정화가 심하게 되는 가능성이 우려됨
-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한일 양국은 감정을 넘어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서로 개척할 수 있는지, 한일 관계의 큰 지도를 그려낼 필요가 있음
- 일본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우호라는 슬로건을 부르짖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역으로 한일 양국의 여론에 반발을 일으키는 가능성조차 우려됨.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더라도 현실은 1965년 한일 조약을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의 '유통기한'이 지났을지도 모름. 그렇다고 하면 한일 양국에서 한일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획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한일 관계의 큰 지도에 써넣어야 함. 그 지도를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지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한일이 양국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획득해야

참고문헌

- i 여론(輿論)과 세론(世論)에 관한 논의를 참조. 『輿論と世論—日本的民意の系譜学』新潮社、2008年.
- ii 「蓄積を無にせぬ対応を」『朝日新聞』2018年10月31日付.
- iii 「韓国最高裁の徴用工判決条約の一方的な解釈変更」『毎日新聞』2018年10月31日付.
- iv 「【主張】「徴用工」賠償命令抗議だけでは済まされぬ」『産経新聞』2018年10月31日付.
- v 「請求権協定を否定」『読売新聞』2018年10月31日付.
- vi 「編集手帳」『読売新聞』2018年11月1日付.
- vii 「文氏ちらつく反日」『読売新聞』2018年11月2日付.
- viii 社説「文政権は收拾策を早急に示せ」『読売新聞』2018年11月30日付.
- ix 「論点韓国は自ら締結した協定守れ」『読売新聞』2018年12月15日付.
- x 「徴用工」日本には遠慮せぬ国情」『朝日新聞』2018年11月1日付.
- xi 「私の論点日韓関係の正念場長期的視野で経済協力を」『朝日新聞』2018年11月8日付.
- xii 対談「日韓和解の誓い道半ば」『朝日新聞』2018年11月14日付.
- xiii 「元徴用工判決を考える」『朝日新聞』2018年11月23日付.
- xiv 「理の眼:なじるだけでなく」『毎日新聞』2018年11月7日付.
- xv 「論プラス:元徴用工をめぐる判決日韓に刺さった棘」『毎日新聞』2018年11月15日付.
- xvi 「世論に揺れる韓国司法歴史問題再生産やまず」『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1日付.
- xvii 「ジレンマ抱える日本対北朝鮮で韓国と連携必要」『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2日付.
- xviii 「日本企業、賠償応じず」『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3日付.
- xix 「風見鶏:韓国は「一国二制度」か」『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11日付.
- xx 社説「韓国政府は早急に対応策を示せ」『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30日付.
- xxi 「国民感情優先国際条約破る」『産経新聞』2018年10月31日付.
- xxii 「産経抄」『産経新聞』2018年10月31日付.
- xxiii 「阿比留瑠比の極言御免韓国に分かる形で怒りを示そう」『産経新聞』2018年11月1日付.

- xxiv 「【主張】文大統領の演説対日関係には言及なしか」『産経新聞』2018年11月2日付.
- xxv 「【加藤達也の虎穴に入らずんば】韓国に2.5兆円ほどを要求しては?」『産経新聞』2018年11月4日.
- xxvi 「【主張】徴用工問題提訴へ韓国の不当性強く訴えよ」『産経新聞』2018年11月7日付.
- xxvii 「【宮家邦彦のWorld Watch】韓国に「法の支配」ないのか」『産経新聞』2018年11月8日付.
- xxviii 「【主張】慰安婦財団の解散約束破る国と付き合いえぬ」『産経新聞』2018年11月22日付.
- xxix 「【阿比留瑠比の極言御免】韓国の背中押す鳩山元首相」『産経新聞』2018年11月22日付.
- xxx 「【正論】日本の「韓国提訴」は盤石なのか」『産経新聞』2018年11月15日付.
- xxxi 「【主張】徴用工判決暴挙止める対抗措置急げ」『産経新聞』2018年11月30日付.

❖ 저자 약력

■ 고바야시 소메이(小林 聡明)

現 니혼 대학(日本大学)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一橋大学) 사회학부 사회학 학사, 석사, 박사. 일본학술진흥회(JSPS) 특별연구원, 동경대, 메릴랜드대, 서울대, 고려대, 동서센터(East-West Center in Washington), 케임브리지대, 경희대 등에서 연구, 교육 활동함. 한반도 지역연구, 동아시아 국제정치사/미디어사를 전공함. 일본어로 된 주요 연구로서 『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空間』(2007), 『メディアと文化の日韓関係』(2016, 공저) 등 논문 다수. 한국어로 된 연구로서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 (2018, 공저) 등 논문 다수.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